

제13장 경제성장 · 소득분배 · 구조변화

Chapter 13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Structural Change in Colonial Korea

차명수

Myung Soo Cha

- I. 인구증가
- II. 자본축적
- III. 기술발전
- IV. 경제성장
- V. 소득분배
- VI. 구조변화
- VII. 결론

이 장의 목적은 낙성대경제연구소의 국민계정 추계가 식민지기의 생활수준,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구조에 관하여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활수준 변화를 보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지표는 1인당 생산인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선 I절에서는 1911-40년의 인구증가율을 추정하는데, 그 속도는 연 1.33%로서 총생산 증가율 3.70%보다 낮았으며, 그 결과 1인당 생산이 매년 2.37%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II절과 III절에서는 식민지기에 일어난 근대적 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이 자본축적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기술발전의 결과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본축적 속도를 알아야 하므로 II절에서는 1911-40년의 자본스톡을 추계한다. III절에서는 이를 이용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를 통해 생산성 증가속도를 추정하고, 이를 요소가격 증가속도를 이용한 추정치와 비교한다. IV절에서는 식민지기의 근대적 경제성장을 지난 3세기 동안의 한국 그리고 세계 경제사의 맥락 속에서 평가한다. 1인당 생산은 전체 생산을 사람수로 나눈 평균치이므로 1인당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지는 경우 하위계층의 생활수준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V절에서는 임금, 지대, 이윤의 변화를 보이는 직접 관찰 자료를 통해 식민지기에 계층간·민족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다. 식민지기에는 거의 모든 계층의 소득이, 그리고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소득도 향상되었지만 민족간·계층간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다. VI절은 식민지기 경제구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변화의 특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찾아낸다. 마지막 VII절은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아 있는 과제를 생각해 본다.

I. 인구증가

1911-40년 총생산이 매년 3.70%씩 증가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시기에 한국 사

람들의 생활수준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 없다.¹ 만일 인구가 3.70%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면 평균 생활수준은 향상했겠지만, 인구증가 속도가 그보다 빨랐다면 평균 생활수준은 하락했을 것이다. 전반적 생활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총생산이 아니라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1인당 생산이다.

한국에서는 1925년 근대적 센서스(국세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처음으로 인구규모를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후 5년 간격으로 국세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1925-40년의 조선인 인구는 연 1.43%의 속도로 증가했다. 1925년 이전에는 경찰 당국이 조사한 연말 상주인구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로 표기함)에 실려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10-25년 조선인 상주인구는 2.33%의 속도로 증가했다.

그런데 1925년 이후의 15년간보다 빠른 1925년 이전의 15년간의 2.33%라는 연말 상주인구 증가율은 1910년 인구가 과소평가된 데서 나온 실제 인구증가율의 과대평가치일 가능성이 높다. 정식 센서스가 아니었던 연말 상주인구 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 이후에도 실시되었는데, 1925-40년의 연말 상주인구 결과를 보면 국세조사에서 집계된 인구를 밀도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기구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던 식민지 초기로 갈수록 과소평가의 정도는 컸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1910-25년의 연말 상주인구 증가율을 실제 인구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내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² Kwon(1977: 21)과 石南國(1972: 60)은 연말 상주인구 통계가 갖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1925년 이후의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1910-25년의 조선인 인구증가율을 각각 1925년 이후보다 낮은 0.76%와 1.31%로 추정했다.³

Kwon, et al.(1975: 3)은 어떤 자료와 공식을 사용해서 0.76%라는 인구증가율을 계산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石南國(1972: 98-99)은 역진 생존율법(method of reverse survival ratios)을 이용해 1925년 이전 인구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어떤 연령계층의 생존율 ${}_5p_x$ 는 x 년에 살아 있는 그 연령계층이 $x + 5$ 년까지 살아남

¹ 이 증가율은 1911-13년의 평균치와 1938-40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² 石南國(1972: 60)은 연말 상주인구가 국세조사에서 집계된 인구 총수보다 현저히 작다는 것을 근거로 연말 상주인구에 누락되어 있는 상당수의 인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Kwon(1977: 21)은 1910-25년의 인구증가율이 1925-30년의 자연인구증가율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1910년의 연말 상주인구는 총인구보다 약 11% 적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³ 이 두 증가율은 각각 Kwon, et al.(1975: 3, Table 1.2)에 수록된 1910년 인구, 石南國(1972: 99, 표 3-11)에 수록된 1910년 인구를 이용해서 계산했다.

을 확률을 말한다. 1925년의 20-24세 연령계층 인구를 n , 그리고 이 연령계층의 1920-25년의 ${}_5p_x$ 를 p 라고 하자. 1920년에는 이 연령계층이 15-19세 연령계층이었는데, 그 숫자는 n/p 일 것이다. 이런 방법을 모든 연령계층에 적용해서 이를 합하면 1920년의 총 인구 추정치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다시 1915-20년의 연령별 생산율을 적용하면 1915년의 인구를 계산할 수 있다. 石南國(1972: 98-99)은 우선 국세조사 결과를 이용해 1925-40년의 연령별 생산률(age specific survival ratio, ${}_5p_x$)을 계산하고 연령별 생산율의 시간 추세를 선형 추정했다. 다음으로 이 추세를 과거로 연장해서 1925년 이전의 p_x 를 계산하고 이를 가지고 1925년 이전의 인구를 추정했다.

이런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1925-40년 연령별 사망률 변화의 직선 추세가 1910-25년에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 두 번째 문제는 국세조사 결과에 제시된 연령별 인구에서 직접 도출한 石南國(1972: 89)의 생산율을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石南國이 계산한 1925-30년, 1930-35년, 1935-40년의 3기간의 연령별 생산율을 보면, 어떤 연령구간에서는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만 다른 연령구간에서는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 사망률 변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율의 상승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한 원인은 인구의 국외이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 또 다른 원인은 국세조사 결과에 포함된 체계적인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채 국세조사 결과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⁵

여기서는 石南國(1972)의 역진 생산율법을 따르되, 1925년 이전의 생산율은 족보에 수록된 생몰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하겠다. 1925년 이전의 생산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1925년 이후의 생산율도 알아야 하는데, 이는 Kwon(1977)의 추정치를 사용하겠다. 여기서 사용하는 족보는 경기·강원·충북·경북·전북에 거주했던 네 양반 가문의 족보이다. 1925년에 생존했던 것이 확인되는 이 네 가문 소속의 남자인구는 1925년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 남자 총수의 0.04%에 해당한다.⁶ 족보에서 생몰년을 확인할 수 있는 인

⁴ 이 문제는 石南國(1972: 87)도 인식했다. 石南國(1972: 93-98)은 연령별 사망률율(age specific mortality rate, q_x)을 이용한 또 다른 추계(추계 B)를 제시한 뒤 생산율을 바탕으로 한 추계(추계 A)와 추계 B의 평균치를 최종 추계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민자 누락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⁵ 국세조사 결과에서 발견되는 오류와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Kwon(1977: chapter 2) 참조.

⁶ 네 가문은 함양 박씨 정랑공파, 전주 이씨 장천군파 및 무안대군파 및 강릉 김씨 6개 파이다. 이에 관한 소개는 차명수(2004) 참조. 영국의 경우 가족 재구성(family reconstitution)과 逆추정(inverse projection)을 통해 1541-1871년의 5년 간격 인구추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사용된 샘플은 전체 인구의 0.66%였다(1801년 기준). Wrigley, et al.(199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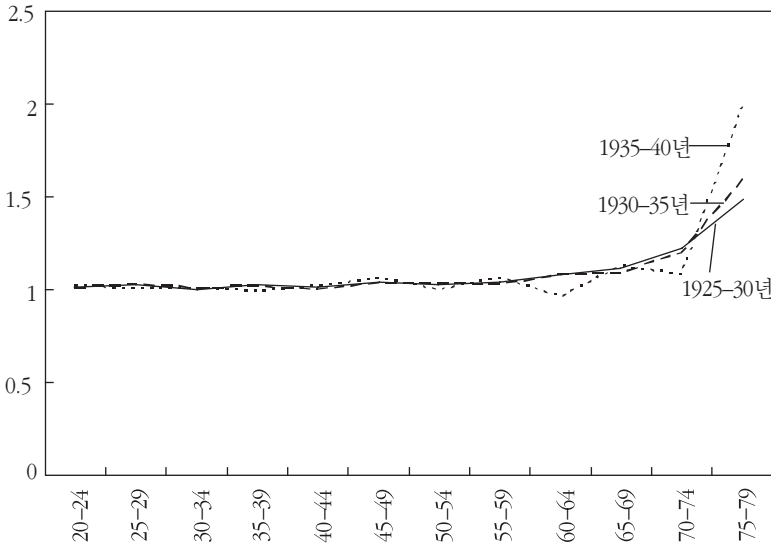


그림 13-1 족보에서 계산한 생잔율의 전체 남성 생잔율에 대한 비율

물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 결혼한 남성들이고,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남성들의 이름은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20세 이상 연령계층의 생잔율만을 계산할 수 있다.⁷ Kwon(1977)에는 1925-30년, 1930-35년, 1935-40년의 전체 남자인구의 생잔율이 수록되어 있다. 족보의 생몰기록을 근거로 계산된 같은 기간의 양반 남성들의 생잔율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자.

그림 13-1은 족보에서 계산한 생잔율을 남자인구 전체의 생잔율로 나눈 값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높은 생활수준을 누렸던 양반의 생잔율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더 커졌다. 70-74세까지는 3시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75-79세 연령구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75-79세 연령구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이 3시기의 비율의 평균값으로 족보에서 도출된 1925년 이전의 생잔율을 나누어 전체 남자인구의 20세 이상 연령별 생잔율을 도출하겠다.

다음 단계는 1925년 이전의 20세 이전의 생잔율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Kwon(1977)이 추계한 5년 간격의 생명표는 1925-45년 생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

⁷ 네 가문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생몰기록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10% 미만이다. 가문별 기록 누락의 비율은 차명수(2004: 135, 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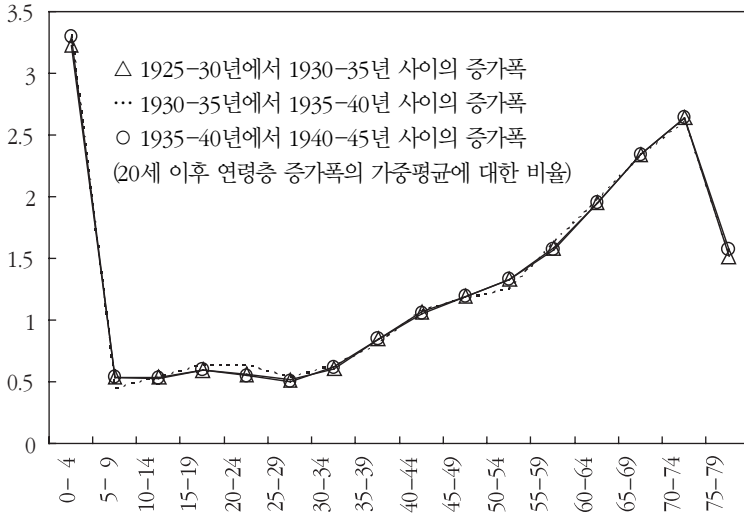


그림 13-2 연령계층별 생잔율 증가폭의 20세 이후 연령계층 생잔율 증가폭 가중평균에 대한 비율

준다. 생잔율 증가폭은 연령구간별로 상당히 달랐다. 0-4세 연령구간의 생잔율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 연령구간부터는 증가폭이 급격히 줄어들다가 40세 이후에는 다시 증가했다. 또 시기별로도 생잔율 증가폭이 상당히 달랐다. 예를 들어, 1925-30년에서 1930-35년 사이의 생잔율 증가는 1930-35년에서 1935-40년 사이의 증가보다 훨씬 빨랐다. 각 연령구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전 연령구간의 생잔율 증가폭의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1925-30년에서 1930-35년 사이는 0.0066인 데 비해 1930-35년에서 1935-40년 사이는 0.00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기별로 생잔율 증가폭의 가중평균이 상당히 달랐지만, 이 평균값에 대한 각 연령계층별 생잔율 증가폭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2는 20세 이상 연령계층 생잔율 증가폭의 가중평균에 대한 각 연령계층별 생잔율 증가폭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 1925-30년에서 1930-35년 사이, 1930-35년에서 1935-40년 사이, 1935-40년에서 1940-45년 사이에 이 비율은 거의 같았음을 알 수 있다. 1925년 이전의 사망률 하락과정에서도 이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1925년 이전의 전 연령층 남자 생잔율을 추정하겠다.

우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족보에서 계산된 20세 이상 양반 남성 생잔율을 그림 13-1에 그려진 곡선의 평균값으로 나눔으로써 전체 남자인구의 생잔율을 구한다. 둘째, 이 생잔율의 단순 평균치를 구하고, 이 값이 1910-15년과 1915-20년 사이에, 1915-20년과

1920-25년 사이에, 그리고 1920-25년과 1925-30년 사이에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계산한다. 셋째, 이 세 변화폭에 그림 13-2에 그려진 세 곡선 평균치를 곱해서 1910-15년과 1915-20년 사이, 1915-20년과 1920-25년 사이, 그리고 1920-25년과 1925-30년 사이의 모든 연령계층의 생산율 증가폭을 추정한다. 넷째, 이 증가폭들을 Kwon(1977)의 1925-30년 생산율에서 순차적으로 빼서 1920-25년, 1915-20년, 1910-15년의 남자 연령별 생산율을 구한다.

이렇게 1925년 이전의 남자 생산율이 구해지면 역진 생산율법을 적용해서 1920년, 1915년, 1910년의 조선인 남자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국세조사에서 집계한 1925년의 연령별 인구에 1910-25년의 연령별 순 남자 이민자 누적치를 더해서 국외이민이 없었을 경우의 1925년의 가상적 연령별 인구를 구한다. 다음으로 여기에 위에서 구한 1920-25년의 연령별 생산율을 나눈 뒤, 1910-20년의 연령별 순 남자 이민자 누적치를 빼면 1920년의 연령별 남자인구가 나오고, 이를 합하면 1920년의 조선인 남자인구를 구할 수 있다. 1915년의 남자인구는 이민이 없었을 경우의 1925년의 가상적 연령별 인구를 1920-25년의 연령별 생산율로 나눈 뒤, 이를 다시 1915-20년의 연령별 생산율로 나눈 다음, 1910-15년의 연령별 순 남자 이민자 누적치를 빼서 구한다. 마지막으로 1910년의 남자인구는 이민이 없었을 경우의 1925년의 가상적 연령별 인구를 1920-25년의 연령별 생산율로 나누고, 이를 다시 1915-20년의 연령별 생산율로 나눈 다음, 다시 1910-15년의 연령별 생산율로 나누어 구한다.⁸ 이렇게 구해진 1910년의 조선인 남자 거주자 수는 824만 1,413명이다.

여자인구는 남자의 연령별 생산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했다. Kwon(1977)에 수록된 1925-45년의 생명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생산율이 증가해감에 따라서 모든 연령구간에서 여성 생산율의 남자 생산율에 대한 비율이 증가해 갔다. 즉 남자보다 여자 사망률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모든 연령구간에서 여자 생산율의 남자 생산율에 대한 비율과 남자 생산율과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전자를 후자에 대해 회귀해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1차함수를 추정했다. 다음으로 이 1차함수 식에 1925년 이전의 연령별 남자 생산율을 대입하면 여자 생산율을 구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⁸ 1910년 이전에는 국외이민이 없었다고 가정하며 일본과 만주로의 이민만을 포함시켰다. 이 두 지역으로의 이민자 수는 각각 권태환·김두섭(2002: 251)에 실려 있는 박재일과 김두섭의 추계를 이용했다. 이 둘을 합한 값을 남녀 연령계층별로 나누기 위해서는 Kwon(1977: 357-361)에 실려 있는 1925-40년의 남녀별 및 연령계층별 이민자 수가 총 이민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서 적용했다.

이 생산율을 가지고 역진 생산율법을 적용해서 1920년, 1915년, 1910년 여자인구를 구했는데, 이렇게 얻어진 1910년의 조선인 여자인구는 791만 3,190명이다.⁹ 1910년의 남자인구의 여자인구에 대한 비율은 1.04로 1925-35년 이후의 성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¹⁰

이렇게 해서 얻어진 1910년의 남녀 인구를 합한 전체 조선인 거주자 수는 1,615만 4,603명이다.¹¹ 『통계연보』에 수록된 연말 상주인구 통계에 따르면, 1910년에는 18만 4,23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910년 조선에는 1,633만 8,84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¹² 국세조사에 따르면, 1940년의 총 거주자 수는 2,430만 1,959명이었는데, 이는 1910-40년 전체 거주자 수가 연 1.33%의 속도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1910-25년의 거주자 증가율은 1.19%로 1925-40년의 1.47%보다 낮다. 표 II-74에는 연도별 인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5년 간격의 추정치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숫자이다. 그렇다면 1910-40년 국내총생산이 연 3.70%씩 증가했으므로 1인당 생산은 매년 $3.70\% - 1.33\% = 2.37\%$ 의 속도로 증가한 것이 된다. 식민지기에 인구와 1인당 생산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 인구가 매년 1.33%씩 증가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인구가 정체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차명수(2004)는 네 양반 가문 족보에서 수집한 생몰기록을 가지고 18, 19세기의 출산력과 사망력을 추정된 뒤, 이를 바탕으로 인구증가율을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18세기에는 양반 인구가 아주 느리게 감소하다가 19세기에 느린 상승으로 반전되었음을 알아냈다. 이는 비양반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18세기에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19세기에는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하거나 정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식민지 시대에 인구가 연 1.33%의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1인당 생산도 매년 2.37%의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은 인구가 정체하던 조선 후기(특히 19세기)에 임금과 지대가 하

⁹ 1925년의 80세 이상 연령층별 남녀 인구 및 1925년 이전의 80세 이상 연령별 남녀 생산율은 石南國(1972: 90, 91)에 제시된 숫자를 이용했다.

¹⁰ 1925년, 1930년, 1935년의 조선인 인구의 성비는 각각 1.05, 1.04, 1.03이었다. 1940년과 1944년에는 성비가 각각 1.01, 0.99로 하락했다.

¹¹ 이 숫자는 『통계연보』에 실린 연말 상주 조선인 수보다 232만 명 정도 많으며, 石南國(1972)의 추계보다 68만 명 정도 많다. 반면 Kwon, et al.(1975)의 추계보다는 127만 명 정도 적다.

¹² 조선인 연말 상주인구 집계와는 달리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연말 상주인구 집계에는 누락자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과도 매우 대조적이다. 농업사회인 조선의 인구 대부분은 노동자와 지주였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인 임금과 지대가 하락했다는 것은 1인당 생산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자본축적

20세기 초에 시작된 한국의 근대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해방 이후 남한의 고도성장처럼 기술발전보다는 자본축적에 힘입은 것이었을까?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1911-40년 동안 고정자본형성이 고정자본소모를 꾸준히 웃돌고 있으므로 식민지기에는 자본축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국부조사(wealth survey)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식민지기 어떤 한 시점의 자본스톡 규모나 자본축적 속도를 간단히 계산해 낼 수 없다. 이런 경우 자본형성과 자본스톡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정한 가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형성 추계로부터 자본스톡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¹³

우선 자본축적 과정을 나타내는 식을 보자.

$$K_{t+1} = K_t (1-\delta) + I_t \quad (13-1)$$

¹³ 타이완 총독부는 국부조사를 실시했다. 해방 후 남한에서는 1968년 최초의 국부조사 이래 약 10년 간격으로 국부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Young(1995)은 국부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계정에 포함된 자본형성 추계만을 이용해 자본스톡을 추계했다. 그 이유는 국부조사 결과와 자본형성 추계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1968년의 국부조사에 나타난 자본스톡에다 이후 9년간 조 투자액을 계속 더해가면 그 값이 1977년의 국부조사에 나타난 자본스톡보다 작다(Young 1995: 651). 이는 감가상각률이 음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양립 불가능한 두 통계 중에서 Young이 자본형성 추계를 이용한 이유는 그것이 국민계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통계들과의 일관성 체크(consistency check)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부조사는 생산설비의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업주들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 적어 합산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주들의 답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사업주들은 생산설비의 가치를 과대보고할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도 크게 평가되고 따라서 영업이익이 과소평가되어 세금을 적게 낼 것이기 때문이다. Pyo(1988)는 국부조사 결과와 자본형성 추계를 자본축적식에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감가상각률을 추정한 결과 실제로 몇몇 부문에서 음의 추정치를 얻었다. 그는 감가상각률이 음수일 수 없다는 사실에 개의하지 않고 음의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식에서 $t + 1$ 기의 자본스톡(K_{t+1})은 t 기의 자본스톡(K_t) 중에서 t 기 동안 감가상각되고 남은 부분($K_t(1-\delta)$)에 t 기의 투자(I_t)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 (13-1) 양변에서 K_t 를 빼고 양변을 K_t 로 나누면 다음 식이 나온다.

$$(K_{t+1} - K_t)/K_t = \Delta K_t/K_t = I_t/K_t - \delta \quad (13-2)$$

식 (13-2)는 자본축적 속도가 t 기의 투자의 자본스톡에 대한 비율(I_t/K_t)에서 감가상각률(δ)을 뺀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자본축적 속도와 감가상각률을 안다면 투자라는 플로 변수로부터 자본스톡을 계산해 낼 수 있다. 溝口(1988: 181)는 식민지기 한국의 자본축적 속도가 1890년대 일본에서의 자본축적 속도(연 2%)와 같으며,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률은 0.12, 건물은 0.07과 같다고 가정해서 자본스톡을 추계했다.

이런 추정방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1890년대 일본의 자본축적 속도가 식민지기 자본축적 속도와 같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본소모(감가상각) 추계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감가상각률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의 국민계정 추계는 내적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의 순자본형성(= 조 자본형성 - 자본소모)은 1934년까지 음의 값을 보이는 데 비해 자본스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Cha 1996).

따라서 여기서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이용해서 식민지기 자본형성으로부터 자본스톡을 추계하겠다.

$$K_0 = \sum_{i=0}^{\infty} I_{-i-1}(1-\delta)^i \quad (13-3)$$

위 식은 우선 시점 0에서의 자본스톡의 크기(K_0)는 아주 먼 과거로부터 그 전 시점(즉 시점 -1)까지의 순투자(즉 총투자 I 에서 감가상각분 $\delta \cdot I$ 를 뺀 값)를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일 먼 과거로부터 시점 0까지 총투자가 매년 g 의 속도로 증가해 왔다면 I_{-i-1} 는 $I_0(1+g)^{-i-1}$ 과 같아지게 되고, 이를 대입하면 등비수열을 얻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K_0 = \sum_{i=0}^{\infty} I_{-i-1}(1-\delta)^i = \sum_{i=0}^{\infty} I_0(+g)^{-i-1}(1+\delta)^i = I_0/(g+\delta) \quad (13-4)$$

즉 시점 0에서의 자본스톡의 크기는 그 시점의 총투자(I_0)를 가정된 총투자 증가율 g 에 감가상각률 δ 를 더한 값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δ 를 임의값 0.05와 같다고 놓고 g 는 1911-16년의 총투자 증가율과 같다고 가정해서 1911년의 자본스톡(K_0)을 구한 뒤, 여기에 매년 총투자를 더하고 매년 5%씩의 자본 감가상각을 뺌으로써 1911-40년의 연도별 자본스톡을 구한다. 다음으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0.05의 감가상각률을 가정해서 계산한 자본스톡에 0.05를 곱한 값의 1911-40년 합계와 실제의 1911-40년 자본소모 총액을 비교해 보면 0.05는 과소평가치임을 알 수 있다. 임의치를 0.01씩 증가시켜 가면서 자본스톡과 자본소모를 재계산해 나가다 보면 감가상각률이 0.07과 0.08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0.07에서 0.08 사이에서 감가상각률과 자본소모 총액 사이에 양의 선형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1911-40년 자본소모 총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계산하면 0.0718이 된다. 이 감가상각률을 이용한 자본스톡 추계가 통계표 II-72에 제시되어 있는데, 1911-40년 연평균 자본축적 속도는 4.92%였다.

III. 기술발전

근대적 경제성장은 자본투입 증가 또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 또는 자본투입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이다. 자본축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술발전이 없는 가운데 노동투입만이 증가한다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므로 1인당 생산은 감소한다. 식민지 시대의 1인당 생산 증가에서는 기술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우선 식민지 조선의 생산함수가 1차동차 생산함수였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성장회계식을 이용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보겠다.

$$\Delta Y/Y = \Delta A/A + \alpha \cdot \Delta N/N + \beta \cdot \Delta K/K + (1 - \alpha - \beta) \cdot \Delta T/T \quad (13-5)$$

이 식은 총생산 증가율($\Delta Y/Y$)을 기술발전 속도($\Delta A/A$), 노동투입 증가율($\Delta N/N$), 자본투입 증가율($\Delta K/K$) 그리고 토지투입 증가율($\Delta T/T$)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α 와 β 는 각각 총생산 중 임금 및 이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노동 및 자본 분배율)을 가리킨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1911/13년에서 1938/40년까지 $\Delta Y/Y$ 은 연 3.70%였고, II절의 추계에 따르면 $\Delta K/K$ 은 연 4.92%였으며, 박섭(2005)에 따르면 $\Delta T/T$ 은 연 0.22%

표 13-1 요소소득 분배율

	노동	자본	토지
농업	0.362	0.133	0.505
제조업	0.504	0.496	0.000
기타 산업	0.537	0.463	0.000
서비스업	0.804	0.196	0.000
전체 경제	0.513	0.255	0.233

주: 기타 산업은 광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을 포함함.

자료: 반성환(1974); Young(1995)

였다. $\Delta N/N$ 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1910년과 1940년 총인구에 두 해의 노동참여율 (0.570과 0.545)을 각각 곱해 보면 이 숫자는 1910-40년간 연 1.18%로 증가했다. 식민 지기에 공장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연 0.68%씩 증가했는데, 노동시간 변화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증가율로 놓는다면 $\Delta N/N$ 은 $1.18\% + 0.68\% = 2.86\%$ 가 된다.¹⁴ 이제 우리는 노동 및 자본 분배율만 알면 기술발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우선 반성환(1974: 187)은 1933년 농업생산비의 구성을 노임 31.6%, 토지 44%, 고정 자본 11.6%, 중간재 투입(경상 투입) 12.8%로 추정했는데, 여기서 중간재 투입을 빼고 농업 부가가치가 세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계산하면 표 13-1의 수치와 같다.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의 요소소득 분배율 추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추계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이득이 각각 GDP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식민지 시대에는 많은 자영업자가 있었고 이들의 임금소득이 영업이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용자보수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노동분배율의 과소평가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수산업과 임업에는 농업의 소득분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산업의 소득분배율은 Young(1995)이 사용한 1960년대 초의 숫자를 사용하겠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의 파괴에서 회복된 1960년대 초의 남한이 소득수준과 경제구조의 면에서 식

¹⁴ 노동참여율은 총인구에서 15-64세 연령구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고 보았다. 노동시간 증가율은 1922년 7월 상시 10인 이상 고용 공장 및 광산의 평균 노동시간 9.32시간(總督府, 『朝鮮及工場に於ける勞働者の調査』)과 1942년 2월 상시 5인 이상 고용 공장의 평균 노동시간 10.67시간(總督府, 『朝鮮勞動統計調査結果報告』)을 이용해 계산했다. 이 정보를 제공한 선재원 교수께 감사한다.

표 13-2 식민지기 경제성장 회계

$\Delta Y/Y$	$\alpha \cdot \Delta N/N$	$\beta \cdot \Delta K/K$	$(1 - \alpha - \beta) \cdot \Delta T/T$	$\Delta A/A$
3.70%	0.95%	1.25%	0.05%	1.44%

민지 시대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이다. 우선, 식민지 시기나 1960년대 초나 산업구조는 모두 농업 중심적이었다. 둘째, 1940년과 1960년대 초의 체위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셋째, Kim and Roemer(1979)는 1인당 순상품생산(per capita net commodity output) 비고를 기초로 1940년의 1인당 소득수준이 회복되는 것은 1960년대 초가 되어서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반성환(1974: 187)은 식민지 시대 농업 소득 분배율과 1960년대 초 남한의 농업소득 분배율이 매우 비슷했음을 보였다. Young(1995)에 제시된 1960년대 초의 제조업, 기타 산업, 서비스업의 소득분배율은 표 13-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부문별 소득분배율에 각 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뒤 이를 합산해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율을 계산했는데, 이는 표 13-1의 마지막 행에 나와 있다.

표 13-2은 이렇게 도출한 소득분배율을 적용해서 성장회계를 한 결과를 보여 준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생산성이 연 1.44%의 속도로 향상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연 3.70%의 총생산 증가의 5분의 2 가가이를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연 2.37%의 1인당 생산 증가의 5분의 3 정도를 설명한다.

이는 기술발전 속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소투입 증가율은 생산요소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에는 근대적 교육이 보급되면서 노동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를 반영하는 보다 정확한 노동투입 지수의 증가율은 여기서 사용한 노동투입 증가율보다 빠를 것이며, 이를 사용해서 성장회계를 한다면 생산성 향상이 식민지기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1966-90년 남한의 비농업 부문의 경우를 보면, 질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요소투입 증가율을 사용했을 때는 생산성 증가속도가 2.7%나 되지만, 질적 변화를 반영시키면 생산성 증가속도가 1.7%로 떨어진다(Young 1995).

표 13-2의 성장회계 결과가 생산성 향상 속도를 어느 정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한 방법은 식민지기의 요소가격 변화율을 이용해서 생산성 증가율을 계산해 보

¹⁵ 1940년과 1967년의 남성 성인 평균 신장은 각각 166.12cm와 167.6cm였으며, 평균 체중은 각각 58.2kg과 58.9kg이었다. Park, et. al.(1994: 172).

는 것이다. 우선 다음 식은 한 나라의 총생산은 노동자, 자본가 지주들의 소득을 합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Y = w \cdot N + r \cdot K + s \cdot T \quad (13-6)$$

이 식을 증분의 형태로 바꾼 뒤 양변을 총산출 Y로 나누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Delta Y/Y = \alpha \cdot (\Delta w/w + \Delta N/N) + \beta \cdot (\Delta r/r + \Delta K/K) + (1 - \alpha - \beta) \cdot (\Delta s/s + \Delta T/T) \quad (13-7)$$

양변에서 $\alpha \cdot \Delta N/N + \beta \cdot \Delta K/K + (1 - \alpha - \beta) \cdot \Delta T/T$ 를 빼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Delta Y/Y - \alpha \cdot \Delta N/N - \beta \cdot \Delta K/K - (1 - \alpha - \beta) \cdot \Delta T/T \\ = \Delta A/A = \alpha \cdot \Delta w/w + \beta \cdot \Delta r/r + (1 - \alpha - \beta) \cdot \Delta s/s \end{aligned} \quad (13-8)$$

즉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실질임금 증가율, 실질자본임대비용 증가율, 지대 증가율에 각각 노동분배율, 자본분배율, 토지분배율을 곱해서 합한 값과 같다. 여기서는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지수로서 허수열(1981)의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실질임금 지수의 가중평균을 사용했다. 이 때 가중치는 전체 노동자에서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숙련노동자 비중은 1910/12년에서 1936/38년까지 6%에서 17%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이용해 도출한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지수는 연 0.30%씩 증가했다.¹⁶ 실질자본임대비용은 Hall & Jorgenson(1967)의 다음 식에 따라 계산했다.

$$r/P = P_k/P \cdot (i - \Delta P_k/P_k + \delta) \quad (13-9)$$

자본재 가격 P_k 와 GDP 디플레이터 P 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추정치를, 명목이자율 i 는 은행 대부 이자율 또는 조선인간 대금업자 이자율을 사용하고, 감가상각률 δ 에는 II절에서 추정한 0.0718을 대입해서 실질자본임대비용을 추정한 뒤 이를 시간에 대해 회귀하면 유의미한 증가 추세도 하락 추세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Delta r/r$ 은 0으로 놓기로 한

¹⁶ 숙련노동자 수 추계방법은 지니계수 추계방법을 설명하는 본 장 끝부분 참조.

다. 마지막으로 단위 면적당 농업 부가가치 생산의 일정 부분을 지주들이 가져갔다는 가정 아래에서 지대 증가율은 농업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1.80%)에서 경작지 확대 속도(0.22%)를 뺀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요소소득 증가율과 표 13-1의 요소소득 분배율을 이용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계산하면 0.45%가 되는데, 이는 요소투입 증가율을 이용해 계산한 증가율 1.44%에 비해 1% 포인트 가까이 느리다.

요소가격 변화율을 이용해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측정하는 이 같은 방법은 쌍대적 접근(dual approach)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Hsieh(2002)는 이를 통해 측정한 1966-90년 남한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연 1.5%였음을 보고했다. 이는 Young(1995)의 같은 시기 남한 비농업 부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계치 1.7%와 비슷하지만, 요소투입의 질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2.7%보다는 현저히 느리다. 이는 식민지기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속도가 1.44%보다는 0.45%에 가까울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은 남한의 경제성장처럼 생산성 향상보다는 자본축적에 힘입은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을 정확히 관찰하기 어려울 때 요소투입 속도를 이용해서 생산성 향상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 — 원초적 접근(primal approach) — 을 사용하면 과대평가치를 얻게 된다. 그러나 원초적 접근은 부문별로 생산성 향상 속도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 경제를 우선 농림수산과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성장회계를 해 보자. 부문별 자본스톡은 영구재고법을 이용해서 추정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감가상각률은 앞서 추정한 경제 전체의 감가상각률인 0.0718과 같다.¹⁷ 노동투입 증가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통계연보』에 제시된 농림수산과 비농림수산 부문 각각의 주업자, 다른 업무를 가진 자, 무업자 인구의 합계를 구한다. 다음 이 두 부문별 합계가 두 부문별 합계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이 비율을 총 노동자 수에 곱해서 두 부문 각각의 노동자 수를 구하는데, 총 노동자 수는 I절에서 추계된 전체 인구에 15-64세 인구 비중을 곱해서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노동자 수 증가율에 앞에서 이용한 연 0.68%의 노동시간 증가율을 더해서 총 노동투입 증가율을 구했다. 이렇게 계산한 요소투입 증가율을 이용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구해 보면,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연 0.62%, 비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연 1.51%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숫자들은 생산성 증가속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식민지기 비농림수산업 총요소

¹⁷ 부문별 자본스톡 추계는 표 II-73에 제시되어 있다.

생산성 증가율 1.51%는 투입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Young(1995)의 남한 비농업 부문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2.7%와 비교 가능하다. 식민지기 농림수산업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0.62%와 직접 비교 가능한 추계는 없다. 황수철(1996: 181)은 1956-92년 남한 농업의 중요소생산성이 연 1.2%의 속도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조산출을 이용한 추계이며, 여기에는 노동시간의 변화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만일 해방 후에도 농업 노동시간이 계속해서 연 0.68%씩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노동분배율을 0.375로 놓는다면 농업부문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95%로 떨어지지만 이는 식민지기 증가속도보다 빠르다.¹⁸ 결론적으로 해방 후 남한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식민지기보다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농림수산업을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비교역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성장회계를 해 보자. 부문별 자본투입은 위에서처럼 영구재고법을 통해 추정한다. 부문별 노동투입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통계연보』에 제시된 산업별 인구를 광공업 및 기타(= 비교역재)의 두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로 주업자, 다른 업무를 가진 자, 무업자 인구의 합계를 구한다. 다음 이 두 부문별 합계가 두 부문별 합계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을 위에서 구한 총 비농업 노동자 수에 곱해서 두 부문의 노동자 수를 구한다. 셋째 광공업 노동자 수에서 광산 노동자 수를 빼서 제조업 노동자 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광업, 제조업, 비교역재 부문 노동자 수의 증가율에 각각 노동시간 증가율 0.68%를 더해서 각 부문의 노동투입 증가율을 구한다.¹⁹

부문별 성장회계를 통해 추정된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표 13-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중요소생산성 증가가 가장 빨랐던 것은 비교역재 부문이었다. 이는 남한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비교역재 부문보다는 제조업에서 더 빨랐다는 Young(1995)의 결과와 대비된다. 근대적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비교역재 부문에서 제조업에 못지않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McCloskey(1981: 114)에 따르면, 영국 산업혁명기의 간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업과 제철업에서의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각각 연 2.6%와 0.9%였던 데 비해, 선박 운송업과 운하 및 철도업에서의 증가율은 각각

¹⁸ 황수철(1996: 286)에 따르면, 1956-91년 노동분배율이 0.54에서 0.21로 꾸준히 하락했는데, 0.375는 이 두 비율의 단순 평균이다. Ban(1987)은 1980년까지의 농업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황수철(1996)보다 훨씬 빠른 4%로 추계했다.

¹⁹ 광업노동자 통계를 제공한 박기주 박사께 감사한다. 광업노동자 수의 출처는 『朝鮮鑛業の趨勢』, 『日本鑛業の趨勢(附錄)』, 『朝鮮鑛業會誌』이다. 공장노동자 통계를 이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업 노동투입을 구하는 이유는 가내 수공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표 13-3 부문별 부가가치 생산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1911-40) (단위: %)

구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비교역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2	-1.93	0.57	0.84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	1.43	10.92	8.68	5.37
전체 생산성 향상 기여	0.36	-0.03	0.05	0.26

주: 비교역재 부문은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 운송, 창고, 통신, 금융, 부동산, 기업 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함.

2.3%와 1.3%였다. 또 Broadberry(1998)에 따르면, 19세기 말 미국과 독일이 영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 덕이었다. 마지막으로 Bernard and Jones(1996)는 1970-87년 14개 OECD 나라들에서의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추계하고 제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수준의 수렴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비스산업에서는 두드러진 수렴 경향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즉 서비스산업 같은 비교역재 부문에서는 선진 기술을 국내에 이식함으로써 뒤진 나라가 앞선 나라보다 빠르게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공산품은 교역재이고 따라서 국제분업이 일어나게 된다.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나라들 사이에 제조업 생산성 수렴 경향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²⁰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비슷했다. 그러나 표 13-3에 제시된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농업성장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것인 반면, 제조업 생산 증가에 생산성 향상이 기여한 정도는 6% 남짓에 불과했다.²¹

마지막으로 이 네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보자. 각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생산성

²⁰ 그러나 이런 사실만을 근거로 보호관세를 이용해서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호관세 설정은 현재 및 미래의 산출과 소비흐름의 수준을 떨어뜨리며, 이런 마이너스 효과가 유치산업 보호를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 속도 증가라는 플러스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Lee(1995)는 1963-83년 한국에서 보호관세는 총요소생산성 향상 증가속도를 감소시켰음을 발견했다.

²¹ 농업 부가가치 성장회계 결과를 제시한 Ban(1979: 101, Table 4-5b)에 따르면, 1920-39년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 0.94%로 표 13-3의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농업 조생산 성장회계 결과(Table 4-5a)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은 -0.01%였다. 이와는 달리 Kang and Ramachandran(1999)의 농업 조생산 성장회계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이 1919-27년 연 2.38%, 1928-37년 연 4.73%의 속도로 상승했다. Kim and Park(2004)은 여러 제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식민지기에 향상되고 있었음을 보였다.

증가율에 각 부문이 전체 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얻은 숫자가 표 13-3의 마지막 행에 제시되어 있다. 이 증가율의 합계는 0.64%로서 전체 경제 생산성 증가율 1.44%보다 0.80% 포인트 작은데, 이는 VI절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낮은 농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 즉 구조변화에 따른 — 생산성 증가를 나타낸다. 요약하면, 식민지기 생산성 향상의 기여도는 구조변화, 농업, 비교역재, 제조업의 순서로 높았다.

IV. 경제성장

식민지기 경제성장은 한국 경제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 것일까? 장하준(2005)은 Angus Maddison의 역사통계를 인용하면서, 식민지기의 1인당 생산 증가속도가 연 2%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방 후 고도성장기 남한의 연 6% 이상의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1960-1970년대는 거의 모든 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빠른 성장을 누리고 있던 ‘자본주의의 황금기’였을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예외적으로 빠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학문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을 식민지가 되기 전 한국의 경제성장 실적과도 비교해 보아야 하고, 또 20세기 초반의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과도 비교해 보아야 한다. Maddison(2001: 265, 304, 330)에 의하면, 1913-50년 세계 전체의 1인당 생산 증가율은 한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 0.91%에 불과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의 1인당 생산은 연 0.02%의 속도로 하락했다. Maddison(2001)을 믿는다면 지난 20세기 후반에 남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한 나라의 하나였던 것처럼, 세계 대공황이 휩쓸고 지나간 20세기 전반에 식민지 조선은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지역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세기 초에 진행된 근대적 경제성장은 이전에는 한국 역사에서 한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대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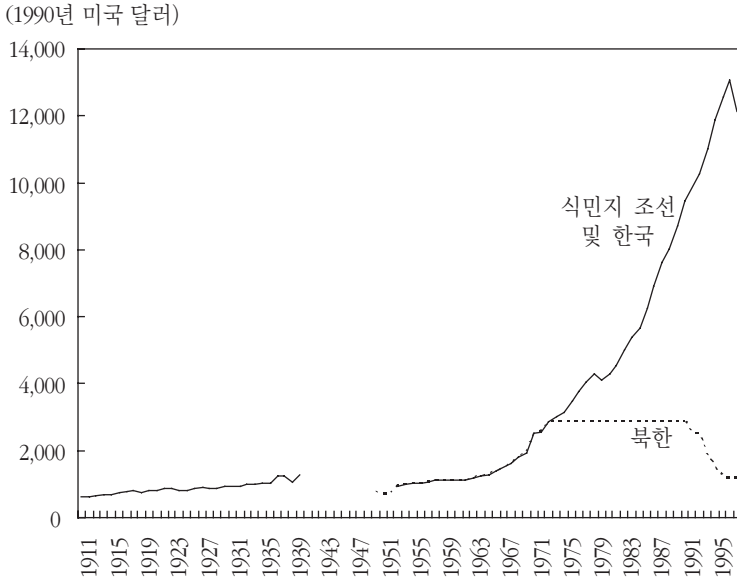
그러면 우선 조선 후기에서 오늘날까지에 이르는 한국 경제사 속에서 식민지기 경제성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비교평가를 할 때 흔히 인용되는 것이 Maddison(1995: 204, 205)의 1911-92년의 식민지 조선과 남한의 1인당 생산통계이다. 그러나 이 장기 시계열 중 식민지기에 관한 수치는 특히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우선 1911-38년의 1인당 생산은 溝口(1988)의 추계를 근거로 한 것인데, 그 추계는 (제12장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통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조사된 통계도 대부분 소실되었다. Maddison(1995)이 제시한 이 통계 암흑기의 1인당 생산은 단편적 수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추계(estimate)라기보다는 “guestimate” 혹은 “통제된 추측(controlled conjecture)”에 불과하다.²² 셋째, Maddison은 1911-38년의 1인당 생산을 backward projection을 통해 1990년의 국제 평균가격(Geary-Kharmis dollar)으로 표시했는데, 한 세기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backward projection을 하는 경우 교역 조건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바이어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Maddison(1995)에 따르면, Geary-Kharmis 달러로 환산했을 때 1인당 생산은 식민지 타이완보다 조선에서 더 높는데, 袁堂軍·深尾京司·馬德斌(2003)이 계산한 두 지역의 물가지수를 이용해 두 지역의 명목 1인당 생산을 각각 나누어 보면 타이완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높다. 이는 backward projection에 따른 바이어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backward projection이 아니라) 1940-53년 물가 데이터를 근거로 식민지 조선과 1953년 이후 남한의 1인당 생산을 비교하겠다. 그리고 1941-52년은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무리한 추계는 시도하지 않겠다.

조선은행(1950년 한국은행으로 개명)은 해방 후에도 계속 1936년부터 연결되는 물가 시계열을 작성하고 『경제연감』 등에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1936년에 비해 1953년에는 도매물가 수준이 23,925배, 소매물가 수준이 30,220배, 명목임금 수준이 23,731배가 되었다. 도매물가와 소매물가 증가율의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은 소매물가에는 중간투입재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종소비재 가격만 반영되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가격 통제와 전후 통제 해제에 따른 급속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소매보다는 도매물가지수가 GDP 디플레이터에 가깝지만, 도매물가지수에는 서비스상품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서비스산업은 매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 서비스 가격은 명목임금의 추이를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명목임금 변화율은 도매물가 변화율과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도매물가지

²² Kim & Roemer(1979: chapter 2)는 단편적 자료를 이용해서 1945-53년의 1인당 생산 변화를 추론하고 있는데, Maddison은 이에 의존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김낙년(2005) 참조.



자료: 1911-40은 본문 참조; 1950년 이후는 Maddison(2001)

그림 13-3 1인당 생산의 추이(1911-98)

수를 디스플레이터로 사용해서 1953년 이후의 1인당 생산을 1935년 가격으로 변환했다. 다음으로 이렇게 도출된 1953-59년 평균 1인당 소득과 (1990년 미국 달러로 표시된) Maddison(2001)의 1953-59년 평균 1인당 소득 사이의 비율을 적용해서 1935년 圓으로 표시된 1인당 소득을 1990년 미국 달러로 환산했다.²³

그림 13-3은 이렇게 계산한 1911-2003년의 1인당 생산의 추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953년 남한의 1인당 소득은 1940년에 비해 30% 정도 하락해서 1920년대 중엽의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는 사실이다. Angus Maddison의 숫자도 해방 후 남한의 1인당 소득이 해방 전에 비해 하락했음을 보여 주는데, 장하준(2005)과 허수열(2005)은 이것이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일본인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인당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 수는 없다. 왜냐하면 1941-52년에는 해방뿐 아니라 남북분단, 한국전쟁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충격

²³ 1936-53년의 물가 및 임금 통계를 제공한 김낙년 교수께 감사한다. 통계의 출처는 조선은행의 『조선경제연보』(1948년)와 한국은행의 『경제연감』(1956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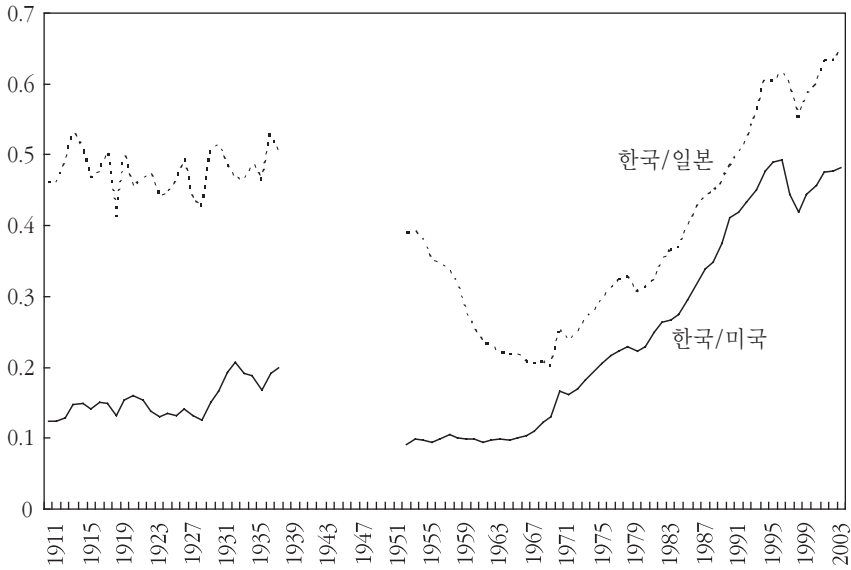
이 발생했고, 이것이 생활수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기간 동안의 1인당 생산을 추계할 수 없고, 따라서 생활수준 하락이 언제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Maddison의 숫자가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하락이 일본인이 돌아가 버린 1945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식민지기 경제성장이 일본인들만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1945년에는 해방뿐 아니라 남북분단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분단으로 지역간 분업 관련이 단절되었는데, 이것이 생산을 위축시켰을 것이다. 또 1944년 이전의 1인당 생산은 남북 전체에 관한 것이고, 1945년 이후의 1인당 생산은 남한만에 관한 것이므로 이 둘은 직접 비교 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1930년대 공업화가 주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북한의 1인당 생산이 남한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방 후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인구유출로 두 지역 사이의 1인당 생산 갭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림 13-3에 의하면, 남한에서 식민지 시대 말기의 생활수준이 회복되는 것은 1960년대 중엽이 되어서이다. 이후 남한에서는 고도성장이 일어나 1998년에는 1911년에 비해 19배 정도의 1인당 소득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반면, 북한의 1인당 생산은 식민지기 말기의 수준에서 한동안 정체하다가 1990대 들어 급격히 하락해서 오늘날 193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1911년의 1인당 생산추계를 이용해서 조선 후기의 1인당 생산수준이 어느 정도였을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19세기에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20세기 들어와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그 연구들에 따르면, 1900년에는 1800년에 비해 마지기당 지주가 거둬 들인 소작료의 양이 반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농업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²⁴ 이러한 각 계층의 소득감소는 1800년경의 1인당 생산 수준이 1911년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의 경제후퇴 속도를 아주 느리게 잡아서 만일 1800년의 1인당 생산이 1910년의 2배라고 한다면, 1800년의 1인당 생산은 1960년대 중엽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²⁵

²⁴ 차명수(2001: 5, 그림 1, 7 그림 2)를 비교할 것.

²⁵ 차명수(2001: 5-6)는 18세기 초에서 20세기 말까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쌀의 양으로 환산해 보고 18세기 초의 쌀 임금 수준이 197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연태(2002)는 아무 근거 없이 '엔터리 자료'를 넣어서 도출한 '엔터리 결과'라고 비판했다. 만일 200년 전 생활수준이 (자동차가 달리던) 불과 한 세대 전의 생활수준과 같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이는 맬더스적 세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근대적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전의 생활수준은 항상 낮은 수준에서



자료: 해방 이전은 본문 참조; 1953-98년은 Maddison(1995; 2001); 1999년 이후는 www.imf.org

그림 13-4 일본 및 미국에 대한 한국의 1인당 생산 비율

이번에는 식민지의 1인당 생산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또 1인당 생산 증가속도는 얼마나 빠른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우선 1911-38년의 한국 1인당 생산은 1990년 미국 물가로 평균 893달러였다. 이는 1998년 방글라데시의 835달러, 아이티의 816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1인당 생산은 1911년 626달러였는데 1998년에는 12,152달러가 되어 한 세기 동안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림 13-4는 1911-2004년 한국의 1인당 생산과 미국 및 일본의 1인당 생산의 비율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식민지 지배가 시작될 당시 한국의 평균적 생활수준은 일본의 절반도 되지 못했고 미국 생활수준의 10분의 1을 좀 넘는 정도였다. 식민지기에 한국의 1인당 생산 증가속도는 일본에 비해 느렸고, 그래서 한국의 1인당 생산의 일본의 1인당 생산에 대한 비율은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식민지기 조선의 1인

정체하지 않았으며, 전쟁·질병 등과 같은 충격의 영향 아래 크게 변화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14, 15세기에 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영국 노동자들이 이 때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한 세기가 지나 (철도가 달리던) 19세기 중엽이 되어서였다. Clark(2004: 39, Figure 1) 참조.

당 생산 증가속도는 미국에 비해서 빨랐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생활수준 격차는 서서히 좁혀져 갔다. 한국전쟁을 거친 뒤 한국과 일본 및 미국 사이의 생활수준은 다시 크게 벌어졌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의 생활수준 격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좁아져 오늘날 남한은 미국의 약 절반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해방 후 일본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져 1970년경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좁아져서 현재 남한의 1인당 생산은 일본의 3분의 2에 도달해 있다. 이런 소득수준의 수렴과 발산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흥미로운 탐구과제로 남아 있다.

V. 소득분배

1인당 생산이 매년 2.37%씩 증가했다는 것은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그런 속도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떤 계층의 소득은 그보다 빨리, 그리고 어떤 다른 계층의 소득은 그보다 느리게 증가했을 것이다. 또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대부분은 노동자 농민이었고, 일본인들의 대부분은 지주 자본가였으므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1인당 소득 증가속도도 달랐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허수열(2005)처럼 식민지 시대에 1인당 생산은 증가했지만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악화되었고 소수인 일본 사람들의 생활수준만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식민지기에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지만, 허수열(2005)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불평등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2.37%보다 느리게 향상되거나 아니면 정체했지만, 생활수준의 하락을 경험한 계층이나 민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식민지 조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인 노동자 농민들이 점점 못살게 되었다는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믿어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보자. 식민지기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판론 중 잘 알려진 것은 ‘기아수출’이다. 기아수출이란 식민지기에 곡물생산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더 빨리 증가해서 1인당 곡물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을 말한다. 1인당 곡물소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곡물생산, 곡물수출, 곡물수입, 인구라는 네 가지 통계가 필요하다. 이 통계들은 모두 식민지기 초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 증가율은 실제의 증가율보다 빠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식민지기 초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선 전체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1인당 곡물소비를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곡물생산은 초기의 과소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분모에 들어가는 인구는 『통계연보』의 연말 상주인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石南國(1972)의 추계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I절에서 이미 주장한 것처럼 전자는 물론이요 후자도 식민지기 초기 인구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1인당 곡물소비 추계에서 식민지기 초기치가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I절에서 새롭게 추계한 1910년의 인구규모와 이후의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1인당 곡물소비를 계산해 보면, 1910-40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락 추세는 사라진다.

게다가 (I절에서 보았듯이) 식민지기에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20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 국내소비 곡물을 단순히 인구로 나누면 1인당 곡물소비 증가율이 과소평가된다(혹은 1인당 곡물소비 감소율이 과대평가된다). 왜냐하면 20세 미만 인구 한 사람이 소비하는 곡물량은 20세 이상 인구 한 사람의 곡물소비보다 적기 때문이다.

식민지기에 조선인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했음을 시사하는 두 번째 증거는 지주가 아닌 농민들의 1인당 소득이 감소했다는 Kimura(1993)의 계산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호당 쌀 소득은 증가했지만 밭작물로부터 얻은 소득이 크게 감소해서 농민 1인당 소득이 감소했으며, 밭작물 소득감소 원인은 1인당 밭작물 생산이 정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격 악화에 있다. 그러나 낙성대경제연구소의 피셔 연쇄지수를 이용한 밭작물 디플레이터는 다른 재화 가격에 비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며, 1인당 밭작물 생산은 상대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식민지기 소득분배 악화를 주장하는 가장 극단적인 숫자는 1910-41년 조선인 1인당 쌀 생산량이 33.2%가 감소했다는 허수열(2005: 116)의 주장이다. 이 계산은 분자(총 쌀생산)와 분모(인구)에 모두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그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우선 계산과정을 재현해 보면, 분자에 들어가는 조선인 총 농업생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본인 지주 소유 토지의 토지생산성이 조선인 소유 토지생산성의 4.6-5.7배나 된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이는 자신이 제시한 증거 — 예컨대, 수리조합구역 내 민족간 토지생산성 격차가 17%였다는 사실 — 와도 모순된다. 둘째, 분모인 조선농민 수를 보면 1910-41년 연 1.6%의 속도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I절에서 1910년의 인구규모를 과소평가했다고 판단한 石南國(1972)의 총 인구증가율 1.38%보다도 현저히 빠른 것이

다. 게다가 (VI절에서 검토할) 식민지기 구조변화의 결과 조선 후기 약 3%에 불과했던 도시인구 비중은 1940년 16%로 증가했다. 이는 농업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현저히 느릴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세 미만 인구비중이 증가했는데 20세 미만의 사람이 공급하는 노동력은 성인 한 사람이 공급하는 노동력보다 작으므로 농업인구 증가속도보다는 성인 농업인구 증가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들 요인들을 고려하여 성인 조선인 농민의 1인당 생산을 다시 계산해 보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²⁶

이제까지 살펴본 1인당 곡물소비, 호당 농업생산, 1인당 농업생산과 같은 증거들은 총량 지표로부터 계산된 숫자로서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제한된 행정능력 때문에 상당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식민지 초기의 총생산, 무역, 인구통계를 아무리 공들여 수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오차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면, 이런 거시통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실질임금, 신장, 평균 수명 등과 같은 직접 관찰 가능한 생활수준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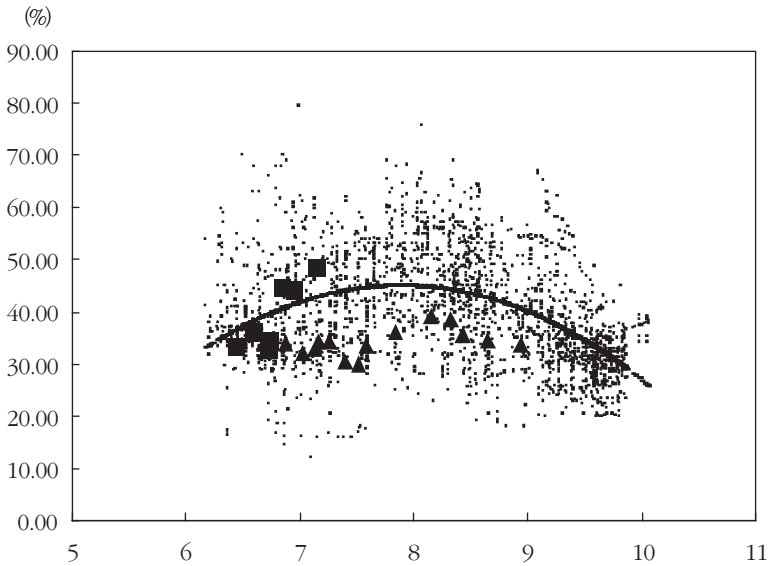
우선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을 보자. 농업 노동자들의 명목임금을 쌀값으로 나눈 값은 1910-35년 매년 1.14%의 속도로 상승했다. 이는 농업 노동자들이 버는 품삯을 가지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차명수 2001: 5, 그림 1). 쌀이 노동자들의 주요 소비품목이기는 하나, 제대로 된 실질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여러 재화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생계비 지수로 명목임금을 나누어야 한다. 허수열(1981)은 여러 주요 소비재 가격을 가중평균한 생계비 지수를 이용해서 실질임금을 추계해 냈는데, 그 결과는 비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았지만 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를 합한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앞의 III절에서 우리는 숙련 및 비숙련 임금의 가중평균을 내어 산출한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연 0.30%씩 증가했음을 보았다.

다음으로 지주들의 수입인 지대를 보자. 이미 여러 연구 결과들이 한 마지기의 논으로부터 지주들이 지대로 받았던 쌀의 양이 식민지 시대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보여 주었다(차명수 2001: 7, 그림 2).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 지주들이 많았고 그 수도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논이 조선인 지주 소유였으므로 조선인 지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²⁶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낙년(2005) 참조.

식민지기에는 평균 성인 신장이 증가했다(Park, et al., 1994; 주익중 2005). 아울러 평균 수명도 증가했다(Kwon 1977). 농업 노동자를 포함한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정체했지만 평균 수명이 증가했으므로 비숙련 노동자 한 명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은 증가했다.

이렇게 근대적 경제성장의 혜택을 노동자, 농민, 지주, 조선인, 일본인들이 누렸지만 혜택의 정도는 민족과 계층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우선 실질임금 증가속도는 지대 증가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느렸다. 즉 노동자, 농민의 소득 증가속도에 비해 지주 소득의 증가 속도가 현저히 빨랐다. 조선에 살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계층구성을 비교해 보면, 지주의 비중이 높은 쪽이 일본인이고 노동자 농민의 비중이 높은 쪽은 조선인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의 1인당 소득이 조선인들의 1인당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을 것이다. 또 허수열(1982)이 보여준 것처럼 비숙련 노동자에 비해서 숙련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더 빨리 상승했다. 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조선인 노동자보다는 일본인 노동자였으



- 주: 1) 가로축은 1990년 달러로 표시된 1인당 소득에 자연 대수를 취한 값이고, 세로축은 지니계수임.
 2) 작은 점들은 여러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관찰된 지니계수이고, 가로축에 대해 오목한 곡선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분석해서 추정한 쿠즈네츠 곡선임.
 3) 삼각형은 해방 후 한국 지니계수이고, 사각형은 식민지기의 지니계수임.

자료: Deininger & Squire(1995); 식민지기 지니계수 계산절차는 본 장 끝부분 참조.

그림 13-5 지니계수와 쿠즈네츠 곡선

므로 조선인 노동자보다 일본인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더 빠르게 향상되었을 것이다. 다만 허수열(2003)에 따르면, 조선인 자본가들은 일본인 자본가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지만 자본가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일본인 소득이 조선인 소득보다 빠르게 향상되었고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일본인 소득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득분배의 불평등화를 '일제의 착취'와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소득분배의 불평등화는 근대적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림 13-5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여러 나라의 1인당 소득이 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가 2,634개의 작은 점들로 표시되어 있다. 이 점들은 사방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 않고 가로축에 대해 오목한 형태의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회귀분석을 이용해 이 점들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2차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도 같이 그려져 있다. 이 2차방정식은 (1990년 달러로 측정된) 1인당 소득이 2,625달러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분배의 불평등화가 일어나며, 소득이 더 증가하면 소득분배가 평등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²⁷

근대적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사망률 변천이 일어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나 자본보다는 노동의 공급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이것이 실질임금 상승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토지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불변이고 또 근대적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으므로 저축률이 낮아 자본축적 속도가 느리다. 근대적 교육이 보급되어 감에 따라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 가지만, 이 속도 역시 생활수준이 낮으므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확대 속도보다 느리다. 경제성장에 따라 토지, 인적 및 물질 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들 생산요소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 생산요소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므로 지주, 자본가, 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비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정체하고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진다.

근대적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소득분배 불평등화가 진행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근대적 공업의 등장에 따른 공업화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집약적인 전통적 수공업이 몰락하면서 그 생산부문으로부터 다량의 노동자들이 방출된다. 근대적인 공업이 성장하지만, 자본

²⁷ 추정식은 $g = -206.08 + 63.77y - 4.05y^2$ 이며, 여기서 g 는 지니계수, y 는 1990년 달러로 측정된 1인당 생산에 자연 대수를 취한 값을 나타낸다. 이 식에 포함된 세 추정 계수는 모두 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극대값은 1인당 소득 y 가 7.87일 때, 즉 1인당 소득이 $\exp(7.87) = 2,625$ 달러와 같을 때 이루어진다.

집약도가 전통적 수공업에 비해서 높으므로 자본에 대한 수요보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느리게 확대된다. 이러한 구조변화 과정에서 전통적 수공업으로부터 방출되는 노동자보다 근대적 공업으로 흡수되는 노동자가 적으므로 임금이 정체한다(Ciccone 1996).²⁸

그림 13-5에는 식민지 시대의 지니계수가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니계수들은 GDP 추계, 요소소득 분배율, 전체 경지에서 차지하는 소작지 비율, 숙련과 비숙련 노동자 간 임금 격차, 계층별 인구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각형은 일곱 개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1911,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년의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1911-25년의 지니계수는 당시의 1인당 소득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1925-30년 지니계수는 급상승해서 1930년대의 한국 지니계수는 쿠즈네츠 곡선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²⁹ 그림 13-5에는 해방 후 남한의 지니계수가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계산방법 및 사용한 소득데이터의 성격이 달라 식민지기의 지니계수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토지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분배가 크게 평등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남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쿠즈네츠 현상이 나타났지만, 남한의 소득분배는 매우 평등한 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20년대에 소득분배가 급격히 불평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니계수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그 한 원인이 인구증가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증가는 비숙련 노동자 공급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비숙련 임금은 정체했다. 반면, 경제성장에 따라 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숙련 노동자 임금은 빠르게 증가했다(허수열 1981). 그러나 인구증가보다 더 중요했던 소득분배 불평등화 요인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에 걸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상대가격 변화였다. 우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자작농가가 몰락하고 소작지율이 증가했는데, 세계 농업공황기 동안 일본에서도 토지소유가 마찬가지로 불평등하게 변했다. 둘째, 상대가격 변화는 농업소득을 감소시키고 비농업 소득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 셋째, 허수열(1981)의 추계에

²⁸ 근대적 경제성장이 진전되어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분배의 불평등화가 멈추고 평등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인구변천의 3단계(少産少死의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공급 증가율이 둔화되는 한편 소득이 올라 저축률이 증가하면서 인적·물적 자본 투자가 활발해지고 자본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생겨나고, 그 결과 소득분배를 평등화하려는 정부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근대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처음에는 불평등해지다가 나중에는 평등하게 바뀌어 가는 경향을 쿠즈네츠 현상이라고 한다.

²⁹ 1930년대에 지니계수는 느리게 상승했는데, 이는 1930년과 1940년에 일본인들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木村光彦(1997)의 주장과 배치된다.

따르면 세계 농업공황기에 속련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지니계수 증가에 기여했다. 그 이유는 속련 임금이 비속련 임금에 비해 경직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의 농산물 가격 폭락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일어난 변화로서 세계 농업공황이라 불린다(차명수 1991).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득분배 악화를 식민지배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³⁰

식민지기에 소득분배가 악화된 결과 1941년이 되면 일본인 1인당 농업수입이 조선인 1인당 농업수입의 96배나 되었다고 허수열(2005: 122)은 주장했다. 이 숫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단히 과장된 것이지만, 두 민족의 1인당 소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임은 통계를 보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의 대부분은 단순 노동자와 농민이었고, 일본인의 대부분은 지주, 자본가, 속련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계층 구성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 1인당 소득격차를 근거로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일본인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일 조선인 농민과 조선인 지주의 1인당 소득을 비교하더라도 커다란 격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훨씬 높은 생활수준을 누렸다는 주장은 지주와 자본가가 노동자 농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등 신기할 것이 없는 발견인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는 민족간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을 뿐 아니라 한국 안에 존재하는 전체 토지나 자본 중에서 일본인 소유 비중이 증가하고 조선인 소유 비중이 감소했다. 1910년에 전체 논지의 2.8%를 소유했던 일본인들은 1935년에 18.6%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 1942년 전체 공업 자산의 95%가 일본인 소유였다. 허수열(2004; 2005)은 이를 보고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공업화가 일본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이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기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많은 자본이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해석이다. 그 많은 자본 중 일부는 토지에 투자되어 일본인 토지소유 비중이 증가했

³⁰ 장하준(2005)은 식민지기에 “일본의 소득분배가 국제기준으로 불평등한 편이었던 데서 유추해 보면, 식민지인 한국의 소득분배는 굉장히 불평등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선 일본의 소득분배가 국제기준으로 불평등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Mizoguchi(2000)에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지니계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20세기 전반 일본 소득분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둘째, 더 잘 살던 일본의 소득분배에 비해 못 살던 식민지 조선의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했으리라는 추론은 납득할 수 없다. 20세기 초 두 나라 모두 근대적 경제성장의 초기 국면에 있었고, 따라서 쿠즈네츠 곡선의 상승 국면에 있었다. 그렇다면 잘 사는 일본의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했으리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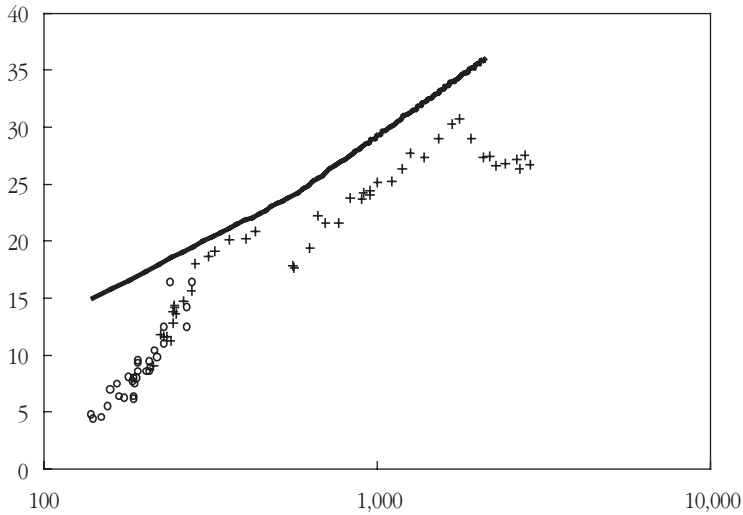
다. 또 더 많은 부분이 공장건설 등에 사용되어 조선 내 자본스톡이 증가했다. 식민지기에 일어난 자산구성의 민족간 배분 변화는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로섬 게임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자본이 흘러 들어와 조선 내 자산규모가 증가하는 플러스 섬 게임의 결과이다. 바구니 속에 한국인이 9개의 사과를, 일본인이 1개의 사과를 넣어 두었다고 하자. 며칠 뒤 한국인은 한국에서 생산된 사과 중 하나를 저축해 이 바구니에 넣고 일본인은 일본에서 생산된 사과 중 4개를 저축해서 가져와 바구니에 넣어 전체 사과 수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전체 사과 중 일본인 소유 사과의 비중은 10%에서 33%로 증가하고 한국인 소유 사과 비중은 90%에서 66%로 감소했다. 이런 경우 일본인이 본국에서 사과 5개를 가져온 사실을 무시한 채 일본인 소유 사과비중 증가만을 보고 일본인만을 위한 사과 축적이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VI. 구조변화

식민지기의 근대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구조가 변화했다. 제12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또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비중은 감소하고 투자 및 정부 지출의 비중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무역이 산출보다 빨리 증가하면서 식민지 경제의 개방도가 증가했다. 이런 구조변화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 절에서는 식민지기의 구조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에서 관찰된 구조변화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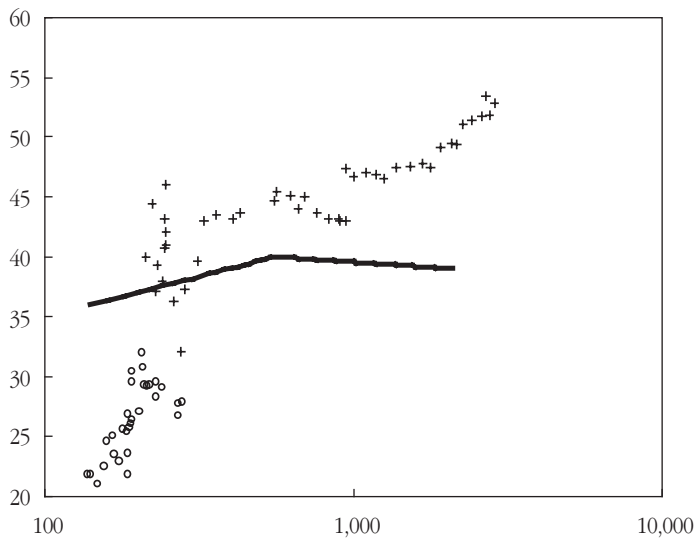
Chenery & Syrquin(1986)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콜롬비아, 한국, 타이완, 터키, 멕시코, 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아홉 나라에서 진행된 구조변화 데이터를 이용해 1인당 소득이 증가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typical)' 구조변화의 수량적 패턴을 계산했다. 이 평균적 패턴과 실제로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에 진행된 구조변화를 비교해 보자.

그림 13-6은 제조업의 비중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가해 가는 과정, 즉 공업화를 보여준다. 식민지 지배가 시작될 무렵 제조업의 비중은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았다. 식민지기에 급속한 공업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식민지기 말기에는 평균치에 상당히 근접했다. 식민지기 공업화의 연장선 위에서 해방 후 남한에서는 공업화가 계속되었는데,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은 약간 낮으나 속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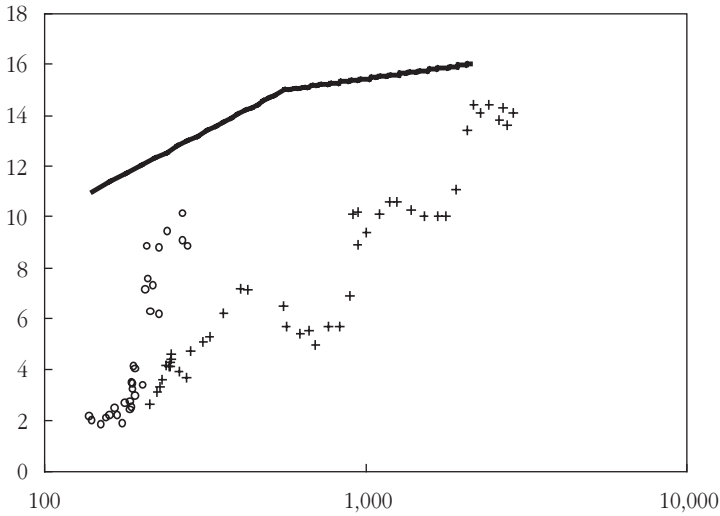
- 주: 1) 가로축은 1970년 달러로 표시한 1인당 소득이며, 1990년 달러로 표시한 1인당 소득에 0.22를 곱해서 계산함. 이 환산 비율의 출처는 www.eh.net.
 2) 가로축은 로그축이고, 세로축의 단위는 %.
 3) 실선은 Chenery & Syrquin(1986)의 평균치, 동그라미는 식민지기의 비중, 십자는 해방 후 남한의 비중을 나타냄.

그림 13-6 1인당 생산과 제조업의 비중



주: 그림 13-6과 같음.

그림 13-7 1인당 생산과 서비스부문의 비중



주: 그림 13-6과 같음

그림 13-8 1인당 생산과 공공설비의 비중

그림 13-7에 따르면, 식민지 초기에는 서비스부문의 비중 역시 평균치에 비해 매우 낮았다. 서비스업의 비중도 식민지기 동안 급속히 증가해서 1940년에는 평균치에 거의 도달했다. 그림 13-7과 13-8을 비교해 보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 증가와 서비스 비중 증가폭이 비슷하다. 즉 식민지기에는 공업화와 서비스 경제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중엽까지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후 증가속도는 느려졌지만 서비스 경제화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평균치가 560달러 수준부터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림 13-8는 서비스와 아울러 비교역재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간접자본(전기, 가스, 수도, 건설)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식민지기에는 사회간접자본의 비중도 급속히 증가해 갔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사회간접자본의 비중은 한국전쟁 이후 급감했는데, 이후 비중 증가가 재개되었으나 아직 국제평균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다.

그림 13-6, 13-7, 13-8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농업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1911년 한국은 평균치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보였다. 식민지기와 1950-1960년대에 농업 비중의 감소 속도는 평균치에 비해 훨씬 빨랐다. 이후 농업의 비중이 평균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속도로 계속 감소했으나, 농업 비중의 수준은 계속 평균치보다 높았다.

요약하면, 식민지기에는 농업의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 사회간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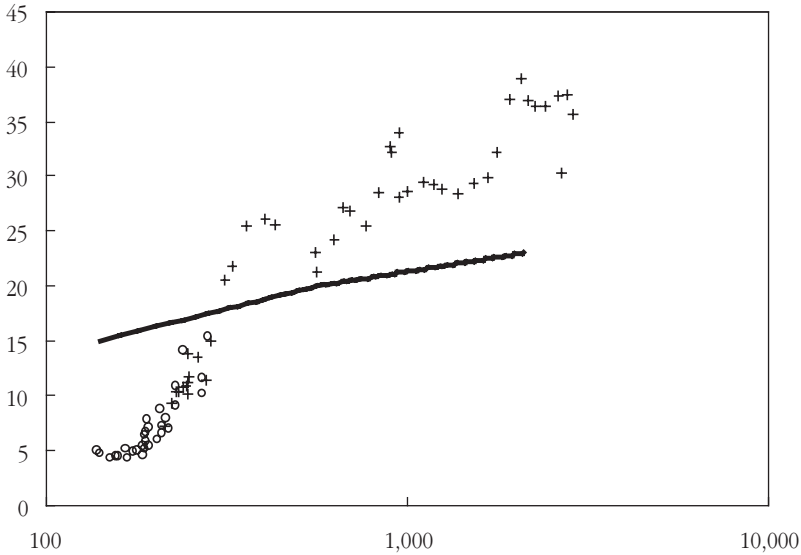
본, 제조업 비중이 증가했다. 이 세 비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폭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11-40년 각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간에 대해 회귀해서 선형 추세를 추정하고 추세치의 증가폭을 계산해 보면, 제조업은 9.5% 포인트, 사회간접자본은 8.4% 포인트, 서비스는 8.3%는 증가했다. 이런 구조변화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까?

우선 수요 측면부터 생각해 보자. 식민지기에는 1인당 생산이 매년 2.37%씩 증가했지만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 속도는 IV절에서 보았듯이 매우 느렸다. 따라서 소득증가가(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다른) 여러 재화 및 서비스 사이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구조변화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식민지 조선은 소규모 개방경제였으므로 교역재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졌다(차명수 1991). 이는 식민지기 구조변화가 주로 공급 측면의 변화(즉 생산요소 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식민지 조선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I절과 II절에서 보았듯이) 노동과 자본 부존량 모두 증가했지만 자본축적 속도가 더 빨랐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패턴의 생산요소 축적은 자본집약적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줄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표 13-1의 산업별 요소 소득 분배율에 따르면, 서비스가 농업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고 농업 비중이 감소했던 것은 서비스 생산성이 농업생산성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 표 13-1에 따르면, 서비스 > 사회간접자본 > 제조업의 순서로 노동집약도가 높는데, 1911-40년 세 산업의 비중은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 세 산업간 노동집약도의 서열이 그대로 생산성 향상 속도의 서열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론은 III절의 표 13-3에 제시된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속도 추계와 합치한다. III절에서는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를 나누어 생산성 향상 속도를 추계할 수 없었으나, 위의 추론은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서비스보다 느리지만 제조업보다는 빨랐을 것임을 시사한다. 표 13-3에 따르면, 제조업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비슷했으므로 네 산업간 총요소생산성 향상 속도의 서열은 서비스 > 사회간접자본 > 제조업 \approx 농업이 될 것이다. 이는 서비스 경제화는 주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때문에 일어난 것인 데 비해, 공업화는 주로 자본축적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의미한다.

해방 후 남한에서 진행된 구조변화의 패턴과 성격은 달랐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 증가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서비스 비중 증가에 비해 현저히 컸다. 1953-89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시간에 대해 선형 회귀해서 얻은 추세치는 이 기간 동안



주: 그림 13-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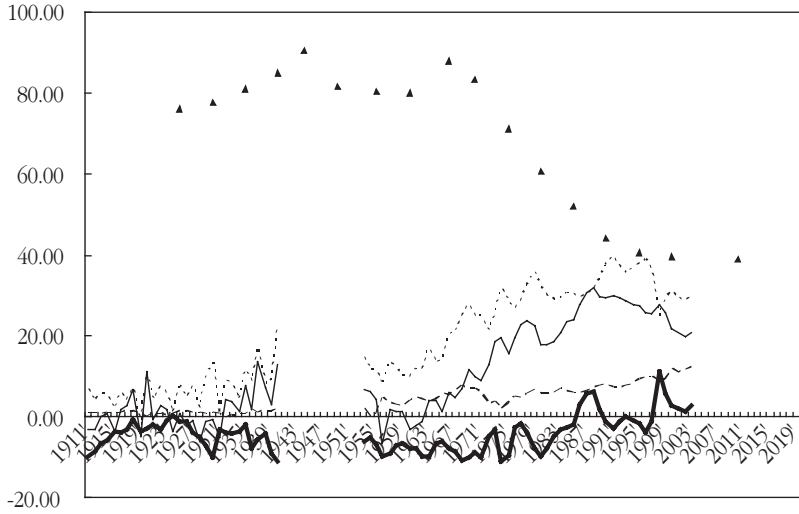
그림 13-9 1인당 생산과 투자율

19.4% 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비중의 증가 폭은 각각 8.0% 포인트, 8.6% 포인트였다. 해방 후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제조업 생산성이 연 3.6%로 가장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농업생산성은 연 1.2%씩 가장 느리게 발전했다.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생산성은 각각 2.5%, 2.6%의 성장률을 보였다.³¹ 이는 남한 공업화에서는 자본축적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민지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부문 비중확대는 생산성 향상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림 13-9는 투자율(투자가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평균치의 증가속도에 비해 한국에서의 투자율 증가가 현저히 빠르다. 그래서 20세기 동안 자본이 빠른 속도로 축적될 수 있었는데, 이는 식민지기보다는 해방 후 남한 경제성장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림 13-10은 총투자율과 각종 저축률이 20세기에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보여준다.

³¹ 농업 기술발전 속도는 1956-92년의 기간에 대한 황수철(1996: 181)의 추계이다. 기타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1966-90년에 대한 Young(1995: 660)의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했다. 황수철의 추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이나 노동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요소투입 지수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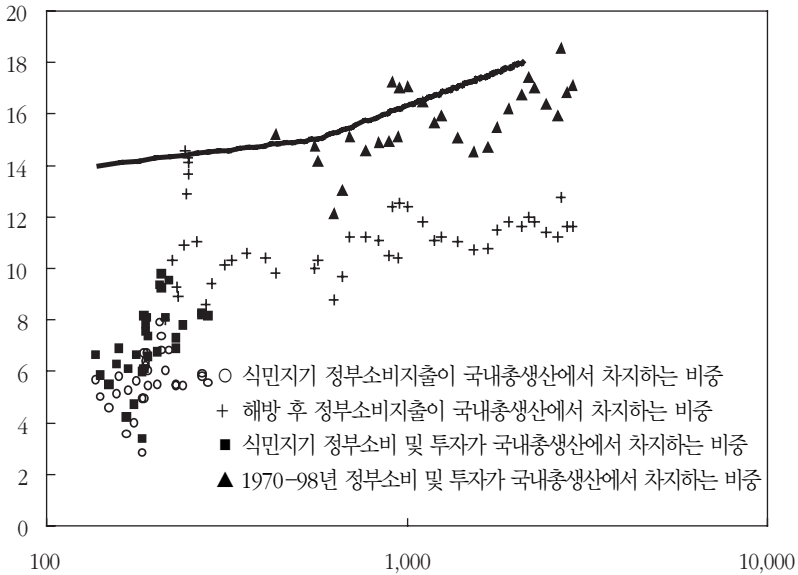
- 주: 1) 위에서부터 삼각형은 부양률, 가는 점선은 총투자율, 가는 실선은 국내 민간 저축률, 굵은 점선은 국내 정부 저축률, 밑의 굵은 실선은 해외투자율을 가리킴.
 2) 해외투자율이 음수일 경우는 자본유입, 양수일 경우는 자본유출을 나타냄. 해외투자에는 경상이전도 포함되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비율로 계산됨.
 3) 2003년 이후의 부양률은 예측치.

자료: 본서의 추계; 한국은행; Cho, Byun & Park(2004).

그림 13-10 투자율, 국내 및 해외 저축률 및 부양률(1911-2020)

투자율은 1911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꾸준히 상승한 뒤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은 총투자율 변화는 기본적으로 민간 저축률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 저축률 상승이 20세기 경제성장을 뒷받침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13-10을 보면 저축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 1960년대 중엽부터 1990년경까지 부양률(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의 15-64세 연령층 인구에 대한 비율)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부양률 하락은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늘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인구가 플러스의 저축을, 비경제활동 인구가 마이너스의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부양률이 하락하면 저축률이 올라간다.³² 그림 13-10을 보면, 부양률은 최저점에 이미 도달했고 이제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증가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³² Kang(1994)은 회귀분석을 통해 부양률이 한국 저축률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보였다. Bloom and Williamson(1997)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이 부양률 하락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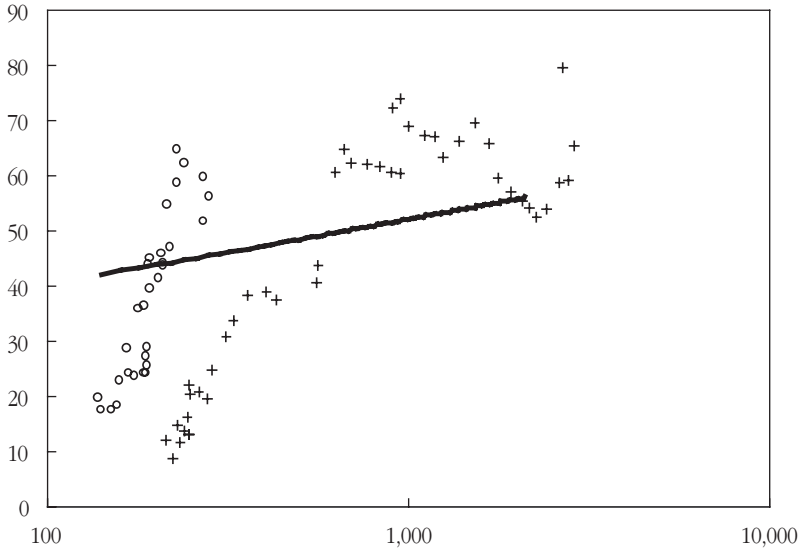
주: 그림 13-6과 같음.

그림 13-11 1인당 생산과 정부지출의 비중

이는 저축률·투자율의 감소, 따라서 자본축적 및 1인당 생산 증가속도의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같은 부양률 변화는 인구변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구변천이란 多産多死의 세계로부터 多産少死의 세계로 이행한 뒤(사망력 변천) 다시 少産少死의 세계로 이행해 가는 (출산력 변천) 변화를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사회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사망력 변천이 1900년경 시작되었고 출산력 변천이 1960년대 중엽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15세 미만 인구비중이 감소하면서 부양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망력 변천을 겪지 않고 출산력 변천을 겪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해방 이후 성장의 씨앗이 이미 1900년경에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11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 전체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1911년 정부소비의 비중(동그라미 표시)은 국제 평균을 훨씬 밑돌았으나, 식민지 시대와 1950년대(십자 표시)에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보다 느린 속 도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해 갔다. 그러나 정부소비 비중은 20세기 내내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림 13-11에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를 합한 값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식민지기(네모 표시)에 비해 해방 후(삼각 표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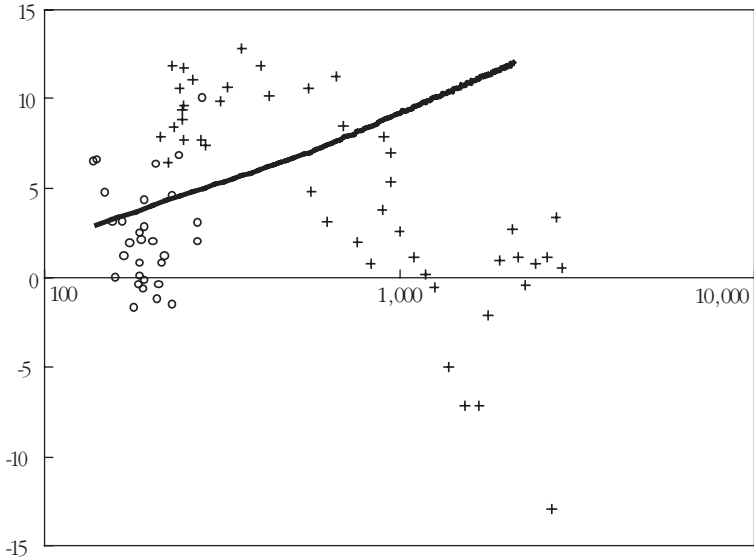
주: 그림 13-6과 같음.

그림 13-12 1인당 생산과 개방도

정부투자의 중요성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방 후 개발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기원을 식민지기에서 찾는 Woo(1991)나 Kohli(1994)보다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김낙년(2003a)과 주익중(2003)에 유리한 증거이다. 정부소비만의 비중을 보거나 정부투자까지 포함한 비중을 보거나 국제 평균을 밑돌았다는 사실은 20세기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13-12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숫자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1911년에 이 비율 — 개방도(degree of openness) — 은 개항기의 무역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우 낮았다. 식민지기에 개방도는 거의 수직 상승해서 1940년에는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한국전쟁 이후 개방도는 다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1980년경까지 꾸준히 상승해서 다시 평균치를 웃돌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정체했다. 식민지기와 1960-70년대를 비교해 보면, 식민지기 개방 상승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개방도가 급속히 상승해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그림 13-11에서 본 낮은 정부지출의 비중과 대비된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을 산업정책보다는 외부지향성에서 찾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3-13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를 보여준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원조, 요소소득 순 유입액, 자본 유입액을 포



주: 그림 13-6과 같음.

표 13-13 경상수지 적자의 비중

합하는데, 이것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넓은 의미의 외국자금 유입액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평균치는 1인당 생산이 140달러에서 2,100달러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한국에서는 이 비율이 1인당 소득이 400달러였던 1970년경부터 떨어지지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본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는 위에서 본 부양률 하락에 따른 저축률의 상승과 맞물려 일어난 변화이다. 저축률 상승이 투자율을 올렸고, 그 결과 자본축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내의 자본수익률(한계생산성)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증가했다.

이 절에서 본 생산 및 지출 구조의 변화는 한국전쟁 이후의 변화가 식민지 시대의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임을 보여준다. 개방도의 변화 경로에서는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 이후 시기 사이에 단절이 있으나, 다른 비율들의 변화에서는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911년 한국의 경제구조는 1인당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농업중심적이고 폐쇄적이었다. 이런 낙후된 경제구조는 식민지기에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1940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치에 접근했고, 개방도는 평균치를 넘어 서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구조변화는 식민지기의 급속한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평균적인 변화에 비해서

도 현저히 빨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VII. 결론

식민지 시대는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수탈과 착취' 했던 제로섬 게임의 시대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었다는 생각은 휴전선 남쪽과 북쪽에서 모두 상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된 중요한 한 이유는 남북한 정부가 각각 검정한 역사 교과서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국민계정 추계는 이런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보였다. 1941-45년의 전쟁기간에 대해서는 1인당 생산을 추계할 수 없지만,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새로운 총생산 및 인구추계는 식민지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911-40년 동안에 1인당 생산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생산 증가의 이면에서 일본인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조선인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극단적 소득분배의 불평등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사람들의 소득이 일본 사람들의 소득보다는 느리게 증가했지만, 조선인들의 평균적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 식민지기에는 전체 자산에서 일본인 소유 자산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권력이 조선인의 자산을 수탈해서 일본인들에게 분배하거나 조선인들이 가난해져서 자산을 일본인들에게 팔아 넘긴 결과가 아니었다. 이는 유입된 일본 자본이 한국에 새로운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자본스톡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필자는 이런 사실들이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역사 교과서가 입을 모아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가설은,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제의 착취와 수탈로 짓밟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사 연구는 18, 19세기에 인구는 정체했으며 생활수준은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인구가 매년 1.33%, 1인당 생산이 2.37%의 속도로 증가했던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이는 남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조선 후기는 정체, 식민지기는 발전의 시대였음을 알려준다.

193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자본이 북한지역에서 축적되었는데, 해방 후 남한은 북한지역의 자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 1950년 북한의 남침은 남한에 남아 있던 자본마저 상당 부분 파괴해 버렸다. 그래서 허수열(2005)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후 남한의 경제성장을 식민지기 성장의 연장선상에서 보려는 것은 무리이며, 두 시기는 단절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식민지 과거와 최근 반 세

기는 공장이나 철도처럼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끊기 어려운 고리들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식민지기 동안 계속된 사망률 변천은 결국 해방 후 남한의 출산력 변천을 가져오고, 이는 부양률을 하락시켰다. 그 결과 저축률과 투자율 상승이 급속히 상승하고 빠른 자본축적이 진행되면서 고도성장이 진행되었다.

둘째, Acemoglu, Johnson & Robinson(2001)은 유럽 국가들의 지배를 받은 지역에는 식민지기의 제도가 독립 후에도 유지 존속되어 독립 후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그리고 그 중요한 한 이유는 식민지기에 형성된 근대적 엘리트들이 독립 이후에 자신들의 모태가 된 식민지기의 제도를 유지시킬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지배를 받은 한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도 남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근대적 시장경제 체제는 식민지기에 형성된 것이었다(Cha 2000). 그리고 식민지기에 출현한 장교, 관리, 판사, 검사, 경찰들은 해방 후 남한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북한군과 빨치산의 노력을 저지한 핵심적 세력이 되었다.

셋째, 식민지기에는 근대교육이 보급되고 근대적 행정 사법 기구,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인적 자본이 축적되었다. 식민지기의 문맹률 감소, 취학률 증가, 조선인 기술자·기능공·숙련공 증가가 이를 보여주는 지표인데(古川 1996; 안병직 1993), 인적 자본소통의 크기와 증가속도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식민지 시대에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났다는 말은 식민지 통치가 근대적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말과는 다르다. 맬더스적 정체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으로의 이행은 한국합병 이전, 갑오개혁 이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1898년부터였다. 지대와 임금의 하락이 멈추고 상승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이우연 2001; 차명수 2001). 실질 농가격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반전된 것은 이보다 더 빠른 1880년대였다(차명수·이현창 2004: 161, 그림 7-A).

그러나 이는 내재적 발전론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밖으로부터의 근대문명의 충격과 이에 자극을 받은 위로부터의 개혁의 결과였다. 우선, 청일전쟁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급증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조선에 대한 토지 투자였다. 일본인 지주들이 가지고 온 일본품종 벼가 1890년대 후반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이는 1900년경 이후의 지대와 임금의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반전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오두환 985: 337-38). 둘째,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 아래 놓인 조선정부는 부국강병을 위해 인구증가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보건위생 개선정책을 실시했다(신동원 1996).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기 전에 근대적 경제성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근대문명을 받아들여 맬더스의 덩어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근대적 경제성장은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면서 빨라졌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1876년 개항을 계기로 선진 생산기술의 전파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는데, 1910년 합병은 이 장벽들을 거의 완전히 무너뜨렸다. 식민지 지배와 함께 외국인(특히 일본인)들의 대조선 투자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본유입이 증가했을 것이다. 또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면서 자본이동뿐 아니라 노동력 이동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특히 일본인 기술자와 숙련 노동자들의 조선유입, 조선인 노동자들의 일본 이민을 통해 기술전파 속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다. 식민지기 무역은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던 개항기에 비해서는 보호무역주의적이었지만, 1950, 1960, 1970년대의 남한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무역주의적이었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도입하고, 근대적 재정통화제도를 확립했다.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철도, 도로, 항만, 교통, 통신 설비를 확충해 나갔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고 기술습득 및 개발을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는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대, 일본 자본시장에서의 자본도입을 통해 공공투자를 늘려 나갔는데, 이는 총 투자율을 올림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했을 것이다.³³

그러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경제성장이 빨라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식민지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남자가 혼자서 좋아하던 가난한 여자를 강제로 데려와 잘 살게 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 남자가 납치 및 감금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19세기 중엽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은 같은 시기 유럽인들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도가 좋은 제도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또 노예제가 철폐된 뒤 남부에서는 노예제도와 비슷한 강제노동제도(gang work)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시장임금의 10배나 높은 임금을 주고 흑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인신의 자유를 높은 임금과 바꾸려는 흑인은 아무도 없었

³³ Cha(1998: 743). 일본정부가 제공한 보충금 등의 경상 이전과 사업공채의 발행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던 조선총독부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켜 공공투자 확대를 도왔을 것이다.

다.³⁴ 이는 사람은 물질적 만족(bodily pleasure)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은 정신적 만족(mental pleasure)을 더 중시하는 존재라는 John Stuart Mill(1863)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범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계다가 근대적 경제성장이 진행되었음을 보이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추계는 1911-40년에 한정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는 징용·징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금액은 아직 계산해 보아야 할 숫자로 남아 있다. 식민지 지배는 1945년 이후 엄청난 경제적 후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분단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이며, 따라서 한국전쟁의 궁극적 원인은 식민지 지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남한의 고도성장이 부분적으로 1940년 이전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어받은 결과라는 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며, 북한경제의 붕괴가 부분적으로 1940년 이후의 명령경제 체제를 이어받은 결과임을 동시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

지니계수 계산에 사용된 자료와 절차

여기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개인들의 소득 자료가 아니라 낙성대경제연구소의 국내총생산 추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필자는 우선 농민, 비숙련 노동자, 숙련 노동자, 자본가, 지주의 다섯 소득계층을 설정하고, 국내총생산이 이들 계층간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계산했다. 그리고 각 계층에 속한 사람수가 몇 명이었는지를 추정한 뒤, 각 계층별 총소득이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고 가정해서 지니계수를 계산했다. 즉 계층 내의 소득 불평등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기서 계산한 지니계수가 과소평가치임을 의미한다.

우선 계층별 총소득 추계를 보자. 우선 표 13-1에 제시된 농업부분의 토지 분배율을 농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에 곱해서 전체 지대소득을 계산한 뒤 여기에 소작지율을 곱해서 지주소득을 도출했다. 소작지율의 출처는 『통계연보』인데, 논·밭 소작지 면적 합계를 논·밭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구했다. 소작지 면적 통계는 1914년부터 나오지만,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기 전인 1918년 이전의 소작지율은 소작지율이 안정되어 있던 1918-25년 평균과 같다고 놓았다. 지주소득을 농업에서 생산된 총 부가가치에서 빼면 농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된다. 제조업, 기타 산업, 서비스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표 13-1에 제시된 각 부분의 자본 및 노동 분배율을 곱하면 이들 생산부분 각각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소득 총액을 구할 수 있다. 허수열(1981)에 제시되어 있는 비숙련 노동자 임금에 대한 숙련 노동자 임금 비율과 후술하는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수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소득 총액을 숙련 노동자 소득과 비숙련 노동자 소득으로 나누었다.

³⁴ 19세기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의 소비수준은 자유로운 신분의 농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보다 높았다. 아울러 흑인 노예들의 기대 여명은 당시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 노동자들에 비해 길었다. Engerman and Fogel(1974: 125, 126, 237, 238).

계층별 인구를 구하기 위해 우선 1절에서 추정된 전체 거주자를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로 구분한다. 『통계연보』 농업편에는 농업인구 및 농가 호수 통계가 실려 있다. 농업인구를 농가 호수로 나누어 보면, 1910년의 4.46명이었던 호당 평균 구수가 (토지조사사업이 끝나는) 1918년에는 5.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후 증가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농업인구 통계가 수록된 마지막 해인) 1932에는 5.43명에 머물게 된다. 필자는 1910-18년의 평균 호당 구수의 빠른 증가가 1910년에 총독부가 농업 호구보다 농업인구를 더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호당 평균 구수 증가속도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1918-32년의 호당 평균 구수의 시간 추세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해 1918년 이전과 1933년 이후의 호당 평균 구수를 계산했다. 이렇게 추정한 1933년 이후의 호당 평균 구수를 1933년 이후의 농업 호수에 곱해서 잠정적 농업인구를 추정한 뒤, 이 숫자가 연말 상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다. 그리고 이를 국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1절에서) 도출한 연도별 전체 인구에 곱해서 최종적인 농업인구를 산출했다.

『통계연보』 농업편에는 1916-32년의 지주 호수 통계가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지주 호수는 1916-27년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정체했다. 필자는 1916-27년의 증가 추세를 1910-15년에 적용해서 이 기간 동안의 지주 호수를 계산했다. 그리고 1932년 이후의 지주 호수는 1927-32년 평균값과 같다고 놓았다. 이렇게 구한 지주 호수에 농업 호당 평균 인구보다 다소 높은 값인 6을 곱해서 지주계급 인구를 구했다. 지주계급 인구를 총 농업인구에서 빼면 농민 인구가 된다.

다음으로 비농업 계급별 인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1930년 국세조사 결과를 보고 4,791명의 자본가를 헤아렸다. 허수열(1993: 193)은 1928년 이후의 연도별 공장수를 제시했는데(합계 2), 그에 따르면 1930년에 4,261개의 공장이 존재했다. 이는 공장 당 1.124명의 자본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허수열(1993)의 연도별 공장수에 곱해 1928년 이후의 연도별 자본가 수를 도출했다. 허수열(1993:193)은 1928년 이전의 연도별 공장수를 보이는 다른 시계열을 제시하고 있는데(합계 3), 이에 따르면 1928년 공장수는 5,342개이지만 합계 2에 의하면 1928년 공장수는 이보다 적은 4,010개이다. 따라서 1927년 이전의 합계 3을 $1.33(=5342/4010)$ 으로 나눈 뒤 여기에 1.124명을 곱해 1927년 이전의 자본가 수를 계산했다. 이렇게 도출한 1910-40년의 자본가 수에 지주와 같은 호당 구수 6을 곱해 자본가 계급 인구를 계산했다. 이를 앞에서 계산한 비농업인구에서 빼면 비농업 노동자 계급 인구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을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로 나누기 위해서 우선 노동자 가구당 평균 인원을 농가 호당 평균 구수보다 적은 3명이라고 임의로 가정하고 노동자 계급 인구를 3으로 나누어 노동자 수를 구한다. 다음으로 1930년과 1940년 국세조사 결과를 보고 두 해에 각각 137만 5,765명, 183만 4,310명의 비숙련 노동자를 헤아렸다. 이 숫자를 총 노동자 수에서 빼면 1930년과 1940년의 숙련 노동자 수를 구할 수 있다. 1930-40년의 숙련 노동자는 연 8.1%씩, 비숙련 노동자는 연 2.9%씩 증가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숙련 노동자 증가속도가 비숙련 노동자 증가속도에 비해 2.79배 빨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증가를 갭을 다른 모든 연도에 적용해서 1930, 1940년 이외 연도의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수를 계산했다. 이렇게 구한 연도별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수에 3을 곱하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계급 인구가 나온다.

